

제2공항 공론화 청원 거부 ‘후폭풍’ 우려

道 “정부관계부처 기본계획 고시 막바지 절차 진행 중…또 다른 갈등 우려” 밝혀

“찬·반 떠나 도민사회 폭 넓은 의견 수렴 국토부 전달”

도의회 차원 공론화 전망…민간위원회 구성 등 논의

제주도가 제주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을 거부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제주 제2공항 관련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처리결과를 제주의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결과 보고자료를 통해 “정부 관계부처가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의도의 요구를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현 단계에서 공론화를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항 인프라 확충은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들과 정당들의 한결같은 공약사업이며, 제2공항 건설은 수십 차례의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거친 공론화의 결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공론조사 요구는 도민사회의 오랜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30여 년을 기다려온 도민에게 찬반

의견을 다시 물어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도는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찬·반을 떠나 도민사회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며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이익, 상생 발전 방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76회 임시회에서 1만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채택했다.

청원 채택에 따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화를 실시하거나,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검토됐다.

결국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도민공론화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도의회 차원의 도민 공론화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도의회는 공론화 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민간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태풍 ‘미탁’ 영향으로 문화재 유실 심각 문화재청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4일 기준 문화재 10건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사진은 천연기념물 513호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석축이 유실된 모습.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복구비

2044억8500만원…피해액 2배

제주, 전국서 11번째…경남 1조2360억 ‘최대’

태풍피해 884억 ‘최고’…대설-강풍-호우 순

최근 10년 간 제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금액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이 복구비로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제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은 104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는 피해액의 2배에 가까운 2044억85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조2360억원으로 피해복구비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전남 1조2150억원, 경기 1조1410억원 순이었다. 제주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였다.

한편 자연재해 종류별로 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84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설 피해가 106억1062만원,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47억5260만원으로 집계됐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6억9361만원, 풍랑으로 인한 피해는 2억3311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휩쓸면서 전국 각지에 수많은 상자를 남겼고, 아직도 인적·물적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의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생존자 구조와 이재민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tasyf@jejuPress.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8일 제주도 국정감사

제2공항 추진 상황 집중 점검

제주에서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등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내 최대 현안이 자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추진 상

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도 오는 15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와 제주신항만 건설사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술독에 빠진 제주, 주취 범죄 기승… 4면 / 제주 아동비만을 1위… 5면

국정감사장 분노케 한 ‘제주청소녀’ 배달 사망사고

한정에 의원, 배달 노동자 안전 사각지대 방치 지적

주방보조 취업 후 배달 강요 참변…사업주 조사도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청소녀 사례를 언급하며 분노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세종시 고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한노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A(당시

만 16세)군이 제주에서 배달 중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시 주방 보조로 취업한 A군이 무면허임에도 사업주로부터 배달을 강요받아 참변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의원은 “16세 청소녀가 원동기 면허가 없는데도 사업주가 배달을 시켜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고용노동지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라며 사업주를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당시 A군의 고용주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고용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했다. 이에 고용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 30만원의 처벌만을 받았다.

한편 한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 2017년 3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배달근로자의 중대 재해를 조사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서희 기자 stasyf@jejuPress.co.kr



JEJU 11
WATER
FORUM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제 11 회

제주물

세계포럼

The 11th
Jeju Water
World Forum

2019. 10. 10~11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화산섬의 지하수 보전과 활용

2019. 10. 10 THU Day 1

개회식

기조강연 [JPDC 취수원관리와 사회적 가치 실현]

주제발표 [수자원 가치 창출과 사회 공헌]

• 한국의 자연기원 줄은물 발골 및 가치고도화 연구

• 하와이 주민들의 물보호 : 과거와 오늘

• JPDC - 유네스코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2019. 10. 11 FRI Day 2

주제발표 [글로벌 수자원 보전·관리 동향]

• 예비양의 취수원관리와 연구활동

• 하와이주의 수문지질과 지하수 고도화 연구동향

• 제주도 물수지분석 개선방안 제안

• 하와이주의 물공급 시스템

